

환자의 책임과 의무

원용주 /보건의문사 의학부장

정 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사회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급변하고 있음을 몸으로도 느낄 수 있게 됐다.

사회 도처에서 「문민시대」라는 단어들 이 꽤나 자연스럽게 나오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이 각 개개인의 권리라도 되는 양 이곳 저곳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들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권리 주장은 의료계에도 불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환자들의 권리가 강조된 나머지 「환자권리장전」이 일부기관에서 선포돼 주목을 받게 되기도 했다.

누구에게나, 어느 계층에게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는 소중한 것이며 그 권리가 귀하게 지켜져야 함은 이의를 달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주어지고 보호되는 데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를 반추해 보고 싶다.

새삼스럽게 의무와 책임을 이러쿵 저

러쿵하는 소리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분야가 보건의료계의 일들이다보니 이 분야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또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또는 자신이 느끼는 증상과, 주위의 가족이나 관계인으로부터의 관심에 찬 관찰로 환자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대부분의 일이라 생각된다.

다만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환자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후에야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환자들이 환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생각지 않은 채 자기가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또는 가족들이) 판단을 한 후에 질환의 치료에 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보다 좋은 시

설, 보다 훌륭한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진단할 권리는 없으며, 자기진단은 엄격히 말해 월권행위인 것이다.

이같은 월권행위가 질환을 키우거나 의사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대개의 환자들은 의사에게 가기 전에 이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시에 또 월권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문진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하려 하지 않거나, 되는 대로 답변을 하거나 과장되게 또는 약화시켜 말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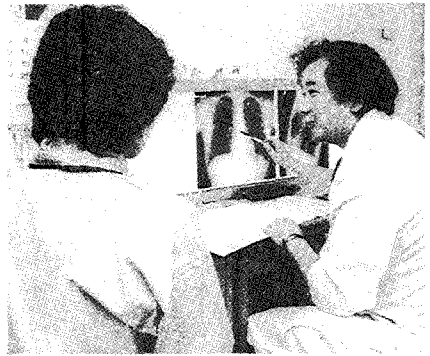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것들, 즉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의사의 물음과 지시에 따라 진료에 응하고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고자 하는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환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마디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는 「권리」는 중요시하면서도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책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일례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개의 방문객(환자)들은 모두가 약사인 척(월권)을 한다. 「○○약 주세요」「××주세요」가 대다수다.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까지 하



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례인 것이다. 과연 이렇듯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환자의 권리(치료)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백 번 물어도 「아니올시다」라는 답이 나온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너무 질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결핵의 경우가 좋은 예인데, 우리나라에서 결핵의 집중적인 치료가 시작된 30여년 전만 해도 결핵은 불치의 병이며, 집안 대대로 망하는 질병(폐병쟁이)이었으나, 근자에 와서는 정확한 진단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쉽게 치료되는 질환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병도 아니라는 경시 풍조가 생겼고 이로 인해 엄청난 수의 환자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질병치료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